

● **국립대 입학정원 15% 줄인다**

오는 2009년까지 국립대학 입학정원의 15%가 감축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입학생은 종전 8만 3천 명에서 7만 1천 명으로 1만 2천 명 정도 줄어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및 자율화추진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07년까지 학부 입학정원(2004년 대비)의 10% 이상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앞으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마련, 교원 증원 또는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2009년 이후 기준 미달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학의 해산·합병시 학생보호 및 교직원 처리, 재산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사립대학 해산·합병 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 수요자의 대학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대학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고등교육평가원(가칭)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대입전형기본 계획 수립을 폐지, 입시관련 집행·관리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위탁처리키로 했다.

사학·법인과 관련, 정부는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고 재산처분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해 기본재산 처분시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평생교육기관 확대 및 야간 교육수요 감소에 따라 그 동안 야간정원의 주간 전환을 제한해오던 것을 오는 2006년부터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단 7개 추가**

올해 '지방대 혁신역량강화(NURI)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단이 7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4일 올해 확보한 2,400억 원의 예산 중 2,200억 원은 지난해 선정된 112개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가로 따낸 200억 원은 대형 3곳(30억~50억 원 지원), 중형 2곳(10억~30억 원 지원), 소형 2곳(10억 원 이하) 등 7개 사업단을 더 뽑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심의를 거쳐 유형별로 1개씩의 사업단을 추천받아 중앙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5월께 지원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확보를 56%, 신입생 충원율 80% 이상을 지원자격으로 삼고 있지만 정원 감축을 통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2004년부터 5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NURI 사업은 대학·지자체·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 112개 사업단이 선정돼 2,200억원이 지원됐다.

● **이공계 5년간 200억 원 지원**

이공계 대학 학과들의 교육과정을 산업체 수요에 맞춰 개편하는 일에 올해부터 매년 40억 원씩, 5년간 총 2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이공계 대학생들의 교육 콘텐츠(내용)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형태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20일 이와 관련, 이공계 개편 정부 지원금은 성장 가능성이 큰 소수 대학의 특정 교육과정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해당 분야 교육 내용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원금은 10~20

개 대학의 20여 개 이공계 전공에만 주어진다. 지원 대상 공모 및 심사는 오는 4월, 지원 대상 선정은 7월에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교육과정이 개편된 대학 학과의 경우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데 훨씬 유리해질 전망이다. 또 그 학과가 더욱 발전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 및 학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입되는 자금은 이공계 학과 교육과정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선하는 데 매년 22억 원, 이공계생들을 위한 경제·경영·법률·IT 교육과정 개발에 매년 8억 원이 쓰인다.

● **올 수시모집부터 전형료 인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부 온라인 제공으로 대학 쪽의 대입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따라 올해 수시모집부터 각 대학이 전형료를 내리도록 강력 지도하기로 했다.

한석수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은 1월 8일 “2005학년도 입시부터 처음 도입된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으로 대학의 전형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인 만큼 2006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내리도록 적극 설득하고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면 대학이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 입력한 뒤 다시 대조하는 등의 수작업을 거쳤으나 이번 정시모집부터 각 고교에서 대학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자료로 제출함에 따라 전형 업무에 손이 훨씬 덜 가게 됐다. 전형료는 일반적으로 5만 원 안팎으로 예·체능 계열이나 논술고사 시행 대학은 1만~3만 원이 추가된다

● **내년부터 의대 학사편입학 폐지**

의대 학사편입학이 2006학년도부터 없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을 폐지하고 정원외 입학정원도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월 25일 밝혔다.

이는 2002년 8월 대통령 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가 의대 입학정원을 10%씩 줄이기로 결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에 맞춰 대학별 입학정원을 2006학년도까지 10%를 감축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학정원, 편입정원, 정원외 입학정원 등을 합해 2006학년도 감축규모가 2002학년도 입학정원인 3천253명의 10%인 325명이 되도록 하

기로 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 195명을 줄인데 이어 편입학과 정원의 입학의 폐지, 축소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의대가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고 있어 어차피 편입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41개 의대는 출신 대학, 계열 등 지원자격에 관계없이 편입고사 등을 통해 2004학년도 217명, 2005학년도 194명을 학사편입학으로 뽑았으며 편입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달해 ‘제2의 의사고사’로 불렸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울러 수의사 인력 수급 관리를 위해 대학이 관련 모집단위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때도 미리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2006년부터 정원의 4%로 늘려**

2006학년도부터 농촌과 산촌, 어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정원이 전체 정원의 4%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1만 5천 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특별전형

인원은 대학 입학정원의 3%(1만 1,000명)였다. 또 농·산·어촌에 총 88개교의 우수 고교가 지정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458명도 배치된다.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2월 1일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잠정 결정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그동안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등은 미흡해 이번에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월 말 최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현재 1.5ha(45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고교생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학자금을 내년부터는 전 농림어업인 자녀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 대학내 민자 기숙사 유치 허용

대학캠퍼스에 민간자본 기숙사와 지역문화센터 등 각종 민간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3일 대학 부지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자가 아니라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지내 소유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학생편의 시설을 민간기관의 투자를 받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산·학·관 연계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감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4월 현재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11.1%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

이 개정되면 기숙사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학생편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대입정원 사상최대 감축 될 듯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부터 대학과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대입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월 6일 "3월 중순까지 대학 및 전문대 신입생 모집이 완전 마무리되면 각 대학으로부터 등록률을 받아 4월께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이미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엄청나게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 대학과 영남·강원지역 전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충원을 공개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쇄도, 올해에는 대학별 전체 충원율만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집단위별 충원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울러 정원 감축 실적을 모든 행·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감축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2005학년도의 1만 5천7백1명(대학 6천1백4명, 전문대 9천5백97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지역별 및 국·사립별 충원을 등은 발표됐지만 대학별로 구체적인 충원율은 해당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았으나 충원율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각 대학이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어차피 뽑지 못하는 허수(虛數) 정원을 대거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2009년까지 3백47개 대학, 전문대, 산업대 가운데 87곳을 통·폐합 등으로 없애고 입학정원을 국립대 1만 2천 명, 사립대 8만 3천 명 등 15%인 9만 5천 명을 감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신입생 충원을 발표 등으로 감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올해도 입학하려는 대학정보 공시제 등과 연계해 예·결산 내역과 졸업생 취업률, 교수 1명당 학생수, 시간강사 비율 등 교육여건과 학교경영 상태를 알려주는 각종 지표도 위험 수준 등의 평가까지 해 순위를 매겨 발표할 계획이어서 각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학년도 모집정원 대비 등록률이 80%에 미달한 대학이 2백13곳 가운데 55곳(26%), 전문대는 1백58곳 가운데 70곳(44%)이었다.

● 농어촌근무 희망 고교졸업생 교대 추천입학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2월 11일 밝혔다. 최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추천 입학시켜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4년간 해당 지역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의무복무를 어기면 장학금을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그동안 장학금만 받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되

돌려받을 수 없었던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강조했다.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강원·전남을 시작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정원내에서 지역 고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했으며 2004학년도에는 춘천교대(강원) 2백21명, 청주교대(충북) 50명, 공주교대(충남) 1백50명, 광주교대(전남) 4백96명 등 8백77명을 뽑았다.

오승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확대하여 초등교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외국대학 공동학위 수여 허용

2005년부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전문대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고등교육 시장개방에 대비,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외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외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학점교류를 하더라도 2장의 복수학위(Dual Degree)를 수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국내외 대학이 차례로 표시된 1장의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교수가 적어도 수업의 2분의 1 이상을 맡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해 외국인 교수 참여 비율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해당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던 것도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해 영어 등 외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 전공이 없더라도 외국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연계 전공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운영 분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교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학 및 산업대와 달리 법령에 근거는 있지만 규정에는 근거가 없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불가능했던 전문대도 공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에 따른 해설자료를 제작해 전국 대학에 배포하되 이번 조치가 단순히 외국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산업대와 영국 노섬브리아대 등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 대학평가 결과 공개해 구조조정 유도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총리가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수장 자격으로 국회 무대에 데뷔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면서 장관에 발탁됐는데 공교육 정상화 복안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리 공교육이 일시 과열, 과도한 사교육, 교권 위축 등의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현재 공교육 내실화의 큰 방향은 옳게 잡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조사 결과

우리 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가들이 대학을 엄정히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전문가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내신 부풀리기와 조직적 수능 부정, 여중생 집단 성폭행, 교사의 답안지 대필 등을 열거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김 부총리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별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개하면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 울산국립대 설립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울산국립대학 설립 일정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5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는 등 구체화되고 있다.

울산시는 국립대학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한국해양

대학의 이전을 통한 국립대학 설립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월 6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계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울산광역시장,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설립추진위원회를 열어, 추진기확단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기확단은 설립추진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울산 정무부시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신설 또는 이전 등 국립대 설립 방식 및 전공과 연관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획단 작업을 통해 4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초에 이를 심의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설립추진위의 목표”라고 전하고 “국립대 설립 문제를 신설이나 이전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 울산에 필요한 대학이 만들어지느냐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울산국립대 설립은 울산시민들이 대단히 필요로 하는 울산 시민의 프로젝트이자 대통령이 꼭 실현시키려는 대

통령과 정부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도 “정부가 국립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한국해양대의 이전을 신설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교육인적자원부도 구조조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 및 인적자원과 관련된 기획 조정 평가만을 담당하는 부처로 개편하는 사실상의 교육인적자원부 구조조정안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의 상당부분은 지자체와 산하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과학기술부를 벤치마킹해 교육인적자원부내에 (가칭)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설치되며, 대통령 주재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가칭)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발족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현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인

적자원부총리)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총리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총리·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또 인적자원 관련 부처 장관,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현행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는 형평성에 초점을 둔 초·중등 교육개혁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전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내에 새로 설치되는 (가칭)인적자원혁신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이 맡게 되며, 인적구성은 노동·산자·정통·과기부 등 타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외부로부터 대폭 충원된다.

정부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 대한 혁신이 성공하려면, 이를 이끄는 정부부처의 혁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부를 모델로 교육인적자원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이공계 박사장교 내년 50명 첫 선발

정부는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고 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를 도입, 매년 15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우선 내년에는 50명의 박사장교를 선발해 국방과학연구원에 배치키로 했다.

2006년 이후부터 박사장교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께 이공계 박사장교 선발절차가 시작돼 2006년 6월부터 첫 이공계 박사장교가 탄생, 근무에 들어간다.

박사장교의 연령은 29세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계 박사장교제도는 이공계 박사인력을 군 장교로 복무시키고 희망할 경우 제대후에도 계속 근무토록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7일 제3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이공계 석사이상 입대 대상자는 1천946명이며 이중 박사급은 92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위성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서비

스에 기상재해 등에 관한 실시간 재난통보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중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대학가 리더십 개발 강좌 개설 잇따라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에서 올 1학기부터 학부생을 상대로 졸업 후 취업과 사회생활의 기초교양을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기초교육원 주관으로 국제사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학부생을 상대로 미래를 위한 자기이해와 리더십 개발'이란 강좌를 개설한다.

외부 초빙교수의 강의로 매주 1차례 2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요구되는 국제감각과 에티켓을 가르쳐 국제사회에 준비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세대와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여학생처에서 개설한 여성커리어와 '리더십(3학점)'에 이어 연세리더십센터 주관하에 리더십 연계전공' 과정을 개설했다.

연세대의 리더십 연계전공 과정은 기초과정(9학점), 전공과정(24학점), 실습과정(3학점)등으로 나뉘며 전공과정은 공공, 기업, NGO, 글로벌화(예술,체육 리더십 포함) 등 5개 세부영역에 걸쳐 다양한 관련 교과목들로 구성됐다.

서강대는 '인턴-십(3학점)'과 '여성과 취업(3학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희대는 '여성직업론(2학점)'을, 이화여대는 1학점짜리 '인턴-십'을 개설했다.

대학 관계자는 "리더십 교육은 개별학문 중심의 기존 전공과정과는 다른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며 "리더십 지식이 다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여러 전공을 폭넓게 섭렵할 수 있는 연계전공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